

기획보도

직원 절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은 '감감'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교수도 우리를 조교로 취급했어요” 우리학교 비정규직이었던 김 씨가 털어 놓은 첫마디다.

상사의 배려로 사무실만은 화목했다. 고마운 마음에 김 씨는 최선을 다했다. 매순간 노력했던 덕분일까. 퇴사 한 달 전 상사로부터 정규직 제안이 들어왔다. 부서도 김 씨의 정규직 전환을 학교에 요청했다. 하지만 학교로부터 돌아온 결과는 단호했다. 승인 거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기 때문에 추후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이유였다. 결국 지난 8월 31일을 끝으로 김 씨는 학교를 떠났다. “2년 동안 지난 곳인데… 이제 아쉬움만 남아있어요”

2017학년도 대학알리미 정보공시에 따르면 우리학교 비정규직은 463명으로 전체직원 903명의 51.3%에 달한다. 직원 2명 중 1명은 비정규직인 꼴이다. 이는 수도권 주요 시립대 8곳과 비교해 2번째로 높은 수치이다. 특히 경희사이버대학은 전체직원 118명 중 84명(71.2%)이 비정규직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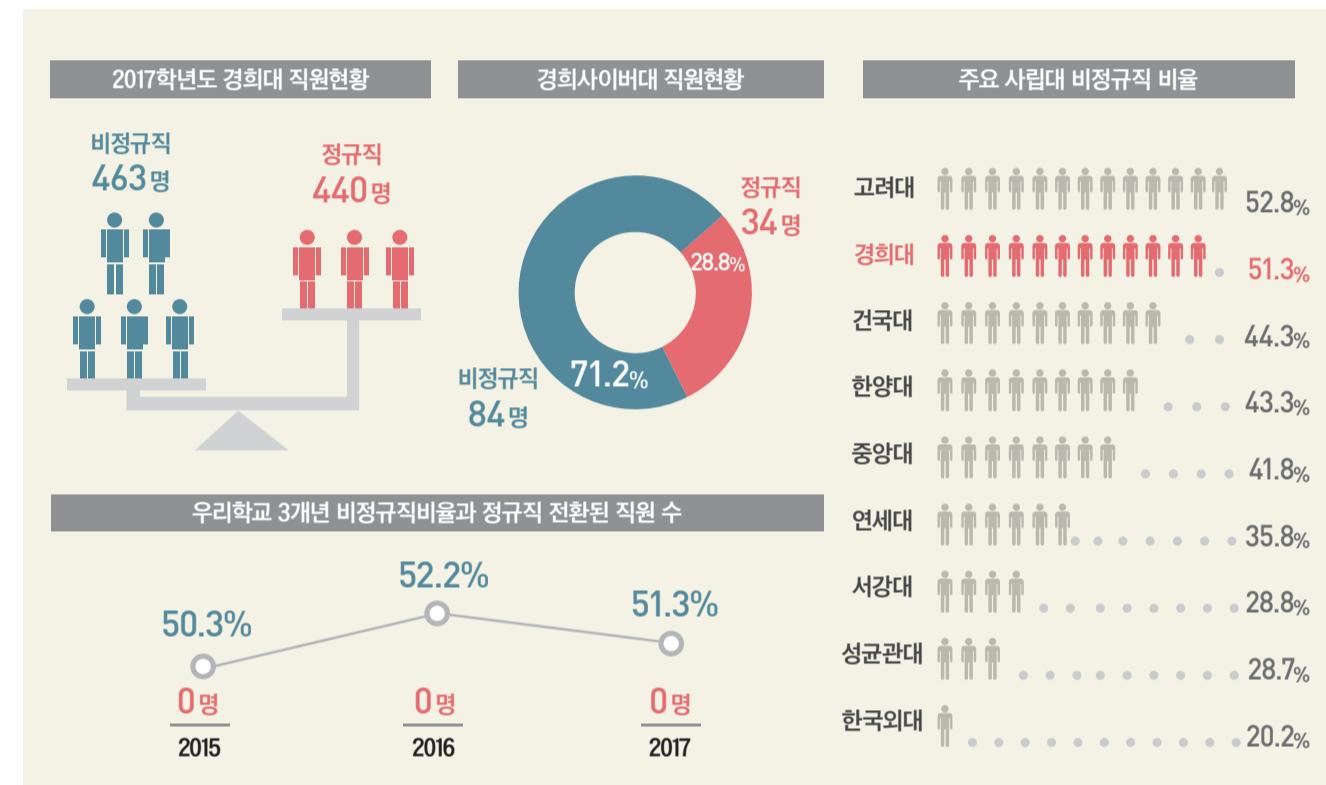
우리학교 비정규직 임금은 같은 연차 정규직의 60%에 불과하다. 또한 자녀학자금 지원과 사학연금 등 학교가 정규직에게 제공하는 복리후생의 혜택도 누릴 수 없다. 비정규직 정 씨는 “내용 취합만 해서 올리는 신입 정규직에 비해, 비정규직이 사실상 실무진으로서 업무량은 더 많지만 임금은 훨씬 적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대학노조) 김병국 정책실장은 “대학 기간제 노동자 임금이 대부분 최저 임금을 조금 상회하는 수준이고, 파견·용역 노동자의 경우 법정 최저임금을 간신히 넘는 정도”이라며 “같은 대학 내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07년 7월, 기간제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정규직보호법안이 시행됐다. 이 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함으로써 정규직 채용 확대와 비정규직 채용 축소를 유도했다. 하지만 결과는 달랐다. 다수의 고용주들이 입법과정과 법을 악용하면서 오히려 고용불안정이라는 새로운 문제를 낳았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년이라는 계약기간 만료와 함께 직장을 잃게 됐다. 우리학교도 마찬가지였다.

인사처에 따르면 2015학년도부터 우리학교 직원의 비정규직 비율은 절반을 넘어섰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정규직으로 전환된 비정규직 직원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인사처



우리대학 전체 직원 중 51%가 비정규직이다. 타 대학에 비해서도 월등히 높은 수치다.



김혜란 계장은 “현재 우리학교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며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3년간 없다”고 설명했다. 이경석(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는 “노동 유연성이라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그 규모가 과도해 교직원의 절반이 비정규직으로서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며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고통이 심하다”고 말했다. 노동 법을 강의하는 강희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그간 값싼 물건을 많이 사듯 비정규

직 노동자들을 늘려왔다”며 “비정규직 문제를 간과할 수도 없고, 선불리 해결하기에도 인력과임이 부담되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말했다.

비정규직 문제가 교육지원서비스를 방해한다는 지적도 있다.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대학노조) 경희지부장이기로서 고용불안에 시달린다”며 “한 가족의 가장으로서 고통이 심하다”고 말했다. 노동 법을 강의하는 강희원(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는 행정업무 효율성을 저해하고 정규직에게도

업무가 가중되는 부담으로 돌아온다”고 말했다. 또한 박 과장은 “2년마다 업무교육을 다시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비효율적”이라며 “노동자이기 전에 가족인 직원을 2년이면 떠나보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학생 감소와 등록금 동결 국면에서 우리학교만의 노력으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긴 벅차다는 것이 중론이다. 인사처 윤제학 처장은 “지난 9년간 등록금은 인하되거나 제자리이었지만 인건비는 상승하는 등 학교가 현재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서 “정규직은 30년 이상의 임금을 보장해야하는 만큼 재정적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전국대학노조 김병국 정책실장은 “국가 차원의 재정적 뒷받침이 절실하다”며 “안정적 재정지원 속에서 비정규직 문제 또한 함께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학교의 두 노조는 자율운영제가 비정규직을 약간했다고 의견을 모았다. 비정규직 문제는 자율운영제가 재정·인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리하게 추진됐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짚었다. 지난 2009년 우리학교는 민주적 대학운영과 단과대학의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자율운영제를 도입했다. 이에 따라 학사, 교무, 장학, 관리 등 기존 대학본부의 많은 업무들이 단과대학의 소관으로 넘어갔다. 단과대학의 업무 범위가 커지자 노동인력수요도 크게 늘어났다. 그러나 인력공급의 대부분은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

경희대노동조합(경희노조) 김종현 위원장은 “중·장기 정책을 갑자기 폐지하긴 어렵지만 단과대학으로 이양됐던 업무를 부분적이거나 다시 대학본부로 가져와야 한다”며 “자율운영제로부터 나타나는 재정·인력 문제 해결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대학노조 경희학원지부 박경규 지부장은 “우리학교 부서가 다른 학교에 비해 필요 이상으로 많고 세분화되어 있다”며 “많은 부서를 운영하기 위한 노동인력 수요가 비정규직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했다.

후마니타스칼리지에서 ‘우리가 사는 세계’를 강의하는 이경석 교수는 우리학교가 비정규직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시각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우리학교는 ‘문화세계의 창조’라는 윤리적 가치를 교육이념으로 내세우는 만큼 학교가 비정규직을 인격적으로 대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가 사는 세계는 이들이 인격적 대우를 받는 세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운동가인 성공회대 하종강 노동아카데미 주임교수도 “후마니타스를 표방하는 경희대학교가 다른 대학보다 비정규직 문제를 책임감 있게 선도적으로 해결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오는 12월 첫째주부터 학교와 경희노조의 공동 주관으로 ‘비정규직 처우 개선 TF’가 시작된다. 인사처 윤제학 처장은 “비정규직의 처우와 근무조건을 개선하고 단계적으로 비정규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파견직 68명 모두 국제캠, 비정규직 1/3 간접 고용

최명규 기자 gyumyeong@khu.ac.kr

우리학교 대학알리미 직원현황 공시에 집계된 파견직 68명이 모두 국제캠퍼스 소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캠퍼스 파견직 직원은 68명으로 비정규직 207명의 32.9%에 달한다. 비정규직 3명 중 1명은 간접 고용된 것이다.

국제캠퍼스 인사처는 “수원, 용인 지역 위치상 인력풀이 작다”며 “파견업체의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으면 채용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국제캠퍼스 인근에 위치한 성균관대(수원)와 한국외국어대(용인)는 파견직으로 노동자를 간접 고용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아주대(수원)의 파견직 직원 수는 7명으로 전체 직원 264명 중 2.7%에 불과했다. 아주대 총괄 지원팀 김예진 직원은 “인력풀이 작아 어려운 면은 있지만 아주대에서 파견직 채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총무처 김도경 과장은 “성균관대는 캠퍼스와 지역을 구분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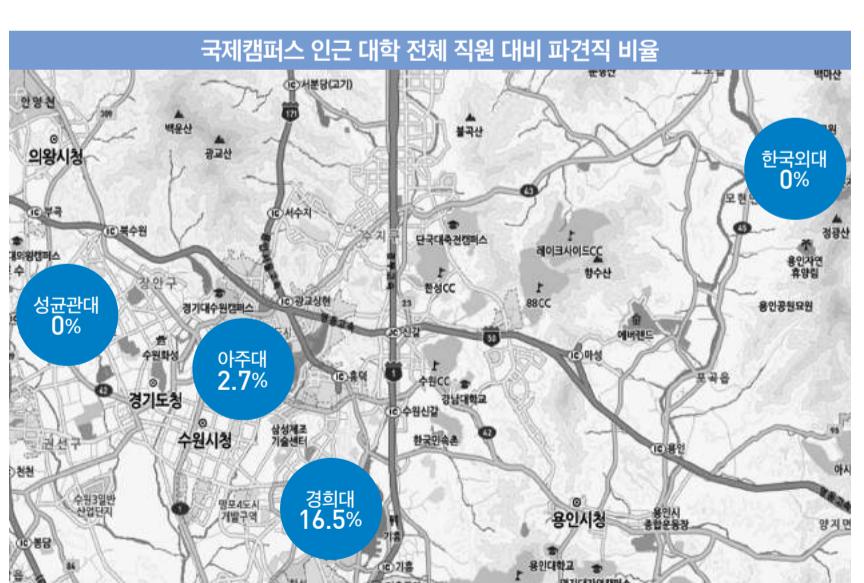
직원을 채용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경희대노동조합(경희노조) 김종현 위원장은 “수원, 용인을 포함한 경기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고, 취업 정보를 온라인으로 주고받기 때문에 채용절차가 어려운 것은 아니다”라며 “인력풀이 작아 파견회사의 인프라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대학노동조합 경희학원지부(민주노총 경희지부) 박경규 지부장은 “대학이 노무관리를 편리하게 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인사처 윤제학 처장은 “계약직과 파견직의 차별대우는 없다”고 단정했다. 실제로 동일 부서, 동일 업무를 하는 서울

학교에서 일하고 업무지도도 학교로부터 받지만 이들의 소속은 학교가 아닌 파견회사이다. 성공회대 노동아카데미 하종강 주임교수는 “노동조건이나 인사권에 개입할 권리가 없다는 이유로 대학이 파견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요구를 외면하는 경향이 크다”며 “노동법상 책임소재가 불명확해지는 만큼 지양해야 하는 고용형태다”라고 말했다. 또한 민노총 전국대학노조 김병국 정책실장은 “간접고용 노동자는 매년 파견 회사와 재계약을 거쳐야 하고, 업체가 바뀌는 과정에서 집단으로 해고 되는 일도 있다”며 “파견직은 비정규직 중에서도 고용 안정성이 매우 불안한 것으로 봤다”고 밝혔다.

전국대학노조 박경규 경희지부장은 “국제캠퍼스가 서울캠퍼스에 비해 많은 파견직을 고용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게 우려될 수밖에 없다”며 “우리학교가 주창하는 경희가족정신에 따라 비정규직이라도 파견직이 아닌 계약직으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역 위치상 파견업체의 인프라를 사용하지 않으면
채용이 어려운 상황

“
”